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공·사기업 또는 공·사단체

제□□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등) ① 제○○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비율”이란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8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등에 채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일반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조(업체등의 신고) 제○○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등의 고용 의무) 업체등은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비율”이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3을 말한다.

제▽▽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직종과 채용인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기업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전체 고용인원의 15퍼센트만큼 고용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공기업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비율 이상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는 없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고용비율에 미달하여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사기업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지급의 절차)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여 지급하려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거주자의 지급 절차 예외) 제○○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연간 누계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지급
3.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4.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의 지급. 다만,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해외이주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 기>

- ㄱ.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미화 7천불을 지급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ㄴ. 연간 누계 지급금액이 미화 12만불인 거주자가 미화 3천불을 지급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ㄷ.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하고 거주자에 해당하며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2천만불인 기업이 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 미화 8천불을 지급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다.
- ㄹ. 해외이주자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해외이주비 미화 8천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다.

※ 모든 지급은 단건으로 이루어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 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생물물질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 효과가 충분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④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조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 승인유예기간

④ 제3항제3호의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 ①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 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년 이내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 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2019년 3월 4일부터 7년의 기간 동안 물질승인을 받은 자가 물질 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 유효기간을 8년으로 할 수 있다.
- ⑤ 2018년 2월 23일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 생물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 었다면, 승인유예기간 동안 물질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D 중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단, A~D는 모두 사람이다)

제00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상 황>

-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자본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A
- 합자회사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출자총액 2억원 중 4천만원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B
- 유한회사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유한회사 자본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6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C
-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 D

- ① 0명
- ② 1명
- ③ 2명
- ④ 3명
- ⑤ 4명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공무원 甲, 乙, 丙이 받게 되는 육아휴직수당의 총합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00조(육아휴직수당) ①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이하 “월봉급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③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상 황>

- 월봉급액이 200만원이고, 1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에 해당하는 甲
- 월봉급액이 300만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후 이어서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乙
- 월봉급액이 400만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후 이어서 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丙

- ① 甲 > 乙 > 丙
- ② 甲 > 丙 > 乙
- ③ 乙 > 丙 > 甲
- ④ 丙 > 乙 > 甲
- ⑤ 丙 > 甲 > 乙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지급받을 최종보상금의 금액은?

<민간 우주선 사고 보상금 산정 기준>

○ 민간 우주선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기준금 및 기초가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조정금액을 최종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피해자가 우주 비행 훈련 이수자인 경우 조정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최종보상금을 지급하되, 조정금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감액하지 아니한다.

○ 기준금은 탑승권 가격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초가액은 기준금에 고도계수와 손해계수를 순차적으로 곱한 금액이다.

- 고도계수는 사고가 난 지점의 고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사고가 난 지점의 고도가 100km 미만인 경우 1, 100km 이상 200km 미만인 경우 1.5, 200km 이상 300km 미만인 경우 2, 300km 이상인 경우 2.5이다.

- 손해계수는 사망인 경우 3, 중상인 경우 2, 경상인 경우 1이다.

○ 조정금액은 사고 원인이 ‘기기 결함’인 경우 기초가액의 30%를 가산하고, 사고 원인이 ‘관리 소홀’인 경우 기초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단, 사고 원인이 ‘기기 결함’과 ‘관리 소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가액의 50%를 가산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한다.

<상 황>

甲은 우주 비행 훈련을 이수하고 민간 우주선에 탑승하였는데, 고도 160k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기기 결함과 관리 소홀이 모두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민간 우주선의 탑승권 가격은 1억원이다.

- ① 3억 375만원

② 3억 3,750만원

③ 4억 5,000만원

④ 6억 750만원

⑤ 6억 7,500만원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구구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할 금액은?

구구(여자)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누누(남자)에게 선물하고자 한다. 구구는 총 5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구구는 아래와 같이 ‘1순위 선호’부터 시작하여 ‘3순위 선호’로 끝나는 구매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 구구는 선순위 선호를 먼저 고려하며, 선순위 선호를 만족시키는 물건의 조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조합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바로 다음 순위의 선호를 고려한다. 단, 선호를 만족시키는 물건의 조합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금액이 적게 드는 조합을 선택한다. 또한 ‘○○의 호감도’란 ○○이/가 선물을 받은 경우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하여 갖는 호감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구가 ‘하트 모양 초콜릿’을 구매하여 누누에게 선물하면 누누가 구구에 대하여 갖는 호감도가 1만큼 오른다.

○ 1순위 선호: 상점의 물건 중에서 누누의 호감도가 가장 많이 오르는 물건을 1개 구매한다.

○ 2순위 선호: 2개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여 누누의 호감도를 29 이상 올린다.

○ 3순위 선호: 2개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여 누누의 호감도를 20 이상 올리면서 구구의 아름다움을 1 이상 올린다.

<상 황>

상점의 물건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물건	가격(원)	효과
달의 거울	9,000	선물 받은 여자의 호감도+1 구매자의 아름다움+1
쫄쫄 쿠키	48,000	선물 받은 여자의 호감도+30
태양의 하프	16,000	선물 받은 남자의 호감도+4 구매자의 아름다움+2
마법의 소라고동	27,000	선물 받은 사람의 호감도+3 구매자의 아름다움+2
사랑의 묘약	12,000	선물 받은 사람의 호감도+7
두근두근 러브캐처	51,000	선물 받은 남자의 호감도+29
하트 모양 초콜릿	3,000	선물 받은 사람의 호감도+1

※ 동일한 물건을 여러 개 구매할 수 있음.

- ① 43,000원

② 45,000원

③ 46,000원

④ 48,000원

⑤ 51,000원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국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의 순서를 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안건의 순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나, 필요에 따라 국회의장이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안, 기타 안건 순서로 논의한다. 이때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건제순*에 따라 논의한다. 동의안과 기타 안건은 해당 안건의 제안일이 빠른 순서대로 논의하되, 제안일이 같은 경우 무작위로 그 순서를 정한다. 상임위원회의 건제순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건제순	상임위원회	건제순	상임위원회
1	법제위원회	2	상업진흥위원회
3	재경위원회	4	통상교섭위원회
5	사서위원회	6	병역위원회
7	일반행정위원회	8	농어촌위원회
9	전산위원회	10	친환경노동위원회
11	건강복지위원회	12	도시주거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

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제출일	안건 제안일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통상교섭위원회	26.4.15.	26.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주거위원회	26.4.7.	26.2.4.
대법관 甲 임명 동의안	법제위원회	26.4.7.	25.12.29.
형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제위원회	26.4.7.	25.10.27.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진흥위원회	26.4.9.	26.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노동위원회	26.4.15.	26.3.15.
UN 서적반입협정 비준 동의안	사서위원회	26.4.5.	26.2.20.
AI 발전위원장 乙 임명 동의안	전산위원회	26.4.6.	26.1.15.
국회의원 丙 징계의 건	-	26.4.15.	26.4.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복지위원회	26.4.15.	25.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위원회	26.4.9.	25.12.25.
양곡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어촌위원회	26.4.10.	26.1.9.
제○○○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6.4.15.	26.4.15.
2025 건강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강복지위원회	26.4.11.	25.1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경위원회	26.4.10.	26.2.6.

*건제순: 먼저 설치된 것에서 뒤에 설치된 것으로 이르는 차례

<보 기>

ㄱ. 국회의장이 순서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논의되는 안건은 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ㄴ. 국회의장이 순서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안건이 될 수 있는 안건은 3건이다.

ㄷ. 국회의장이 필요에 따라 대법관 甲 임명 동의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고 순서를 변경하면, 여덟 번째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건강복지위원회이다.

ㄹ. 국회의장이 필요에 따라 임명 동의안들을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고 순서를 변경하면, 열세 번째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통상교섭위원회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 국회에는 A당, B당, C당, D당, E당 총 5개의 정당이 있다. 甲국 국회의 재적의원은 총 300명이다. 甲국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안건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본회의 출석에 관한 A~E당의 계획이다.

- A당: 우리 A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본회의에 출석할 것입니다.
- B당: 우리 B당은 A당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날에는 본회의에 출석할 것입니다.
- C당: 우리 C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내내 본회의에 출석할 것입니다.
- D당: 우리 D당은 B당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날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에 출석할 것입니다.
- E당: 우리 E당은 목요일에 본회의에 출석할 것입니다.

각 정당의 의원들은 본인의 정당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날에만 출석하며, 해당 날짜에는 해당 정당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 또한,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한 경우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상 황>

甲국 국회의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정당	A당	B당	C당	D당	E당
의석수(석)	117	69	5	38	71

<보 기>

ㄱ. 이번 주에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날은 최소 3일 이상이다.

ㄴ. 이번 주 화요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A당의 모든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가결될 수 있다.

ㄷ.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A당의 모든 의원이 반대할 경우, 해당 안건은 가결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경고등이 작동하고 있는 시각으로 가능한 것은?

- A수력발전소는 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초당 방수량의 합계가 5,000t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10분간 작동하고 멈추는 경고등을 설치하였다.
- A수력발전소는 17시부터 20시까지만 방수하였으며, 그 시간 동안 경고등은 총 10분 작동했다.
- A수력발전소에는 수문이 甲, 乙, 丙, 丁 총 4개만 있으며, A수력발전소에서 방수한 3시간 동안 각 수문은 모두 방수한 적이 있다.
- 乙수문은 甲수문이 방수를 다 마친 이후에만 방수할 수 있다.
- 丙수문과 丁수문은 동시에 방수할 수 없다.
- 각 수문은 한 번 방수 시에 ‘최소방수시간’ 이상 방수해야 하며, 각 수문의 초당 방수량과 최소방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초당 방수량(t)	최소방수시간(분)
甲	1,000	90
乙	2,500	90
丙	500	45
丁	2,500	135

- ① 17:45
- ② 18:11
- ③ 18:27
- ④ 18:32
- ⑤ 19:05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유물을 배치할 수 있는 조합의 개수는?

甲은 유물 5점(A~E)을 전시관 3곳(1~3관)에 배치하려 한다. 甲은 A를 2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외의 배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각 전시관에는 최소 1점 이상의 유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A와 B는 같은 전시관에 배치할 수 없다.
- C는 1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 D를 2관에 배치하면 E도 2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 D를 2관에 배치하지 않으면 E는 3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 3관에는 유물을 최대 2점까지만 배치할 수 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 ⑤ 6개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법률의 제정 연도만 고려하고 제정월 및 제정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甲은 A국 국회에서 제정된 7개 법률(「군인전역기본법」, 「화장품안전법」, 「과속방지법」, 「부정행위금지법」, 「대규모주택정비법」, 「국회장학재단법」, 「인재양성법」)의 제정 연도를 확인한 결과, 2014년에 1개, 2015년에 2개, 2016년에 1개, 2017년에 2개, 2018년에 1개의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 「화장품안전법」은 「군인전역기본법」 및 「국회장학재단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
- 「부정행위금지법」과 「국회장학재단법」은 「인재양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
- 「과속방지법」과 「국회장학재단법」의 제정 연도 차이는 「부정행위금지법」과 「군인전역기본법」의 제정 연도 차이보다 크다.
- 「군인전역기본법」 및 「국회장학재단법」은 일의 자리 숫자가 홀수인 연도에 제정되었다.
- 「대규모주택정비법」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계속되어 발의된 연도에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 「부정행위금지법」은 2016년 전에 제정되었다.

<보 기>

 ㄱ. 「군인전역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다.
 ㄴ. 「화장품안전법」은 2017년에 제정되었다.
 ㄷ. 「대규모주택정비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3.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에 들어갈 수의 합은?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자국기준법과 외국기준법이 있다. 자국기준법은 자국통화 1단위당 외국통화의 교환 비율을 환율로 채택하는 것이다. 반면, 외국기준법은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의 교환 비율을 환율로 채택하는 것이다.

甲국의 화폐 단위는 ‘갈레온’, 乙국의 화폐 단위는 ‘시클’, 丙국의 화폐 단위는 ‘크넛’이며, 甲국과 丙국은 자국기준법을, 乙국은 외국 기준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甲국에서는 갈레온과 시클 간 환율 표기 방식으로 시클/갈레온을 사용한다. 甲국, 乙국, 丙국의 환율은 모두 연동되어 있다.

<대 화>

A: 어제 甲국에서 갈레온과 시클 간 환율은 210, 갈레온과 크넛 간 환율은 1.25야.
 B: 乙국에서는 시클과 갈레온 간 환율이 어제보다 오늘 20% 상승했으니, 오늘 乙국에서 시클과 갈레온 간 환율은 ㉠ (이)네.
 C: 오늘 丙국에서 크넛과 시클 간 환율은 189야. 그러면 오늘 丙국에서 160크넛으로 바꿀 수 있는 갈레온의 양은 어제와 ㉡ 갈레온 만큼 차이 나겠어.

※ A, B, C는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대화 중이며, 이들은 환율을 언급할 때 숫자만 이야기함.

- ① 183
 ② 219.8
 ③ 260
 ④ 260.3
 ⑤ 296.8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제시된 사람 외에는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는다)

의전은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외교 행사, 국가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영접에서 행해지는 국제적 예의(국가의전)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지켜야 할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예의범절(사교의례)을 포함한다.

자동차의 상석과 관련된 K국의 의전 규칙은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와 일행 중 1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때, 6인승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옆자리가 언제나 상석이다. 상석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다. 한편, K국의 5인승 자동차 의전 규칙은 다음과 같다.

<K국의 5인승 자동차 의전 규칙>

1.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3인)

③

①

앞

운전자

뒤

☒

②

2.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4인)

③

①

앞

운전자

뒤

④

②

3. 일행 중 1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4인)

①

②

앞

운전자

뒤

☒

③

※ 좌석의 숫자가 클수록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앉고, 운전자의 자리는 항상 좌측 앞좌석인 경우를 가점함.

<보 기>

ㄱ. A위원회 소속 甲(1급), 乙(2급), 丙(5급)이 운전기사가 있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K국의 의전 규칙에 따르면 甲은 항상 우측 뒷좌석에 앉는다.
 ㄴ. B위원회 소속 甲(1급), 乙(2급), 丙(5급), 丁(6급) 중 1인이 5인승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K국의 의전 규칙에 따르면 甲은 앞좌석에만 앉고, 乙, 丙, 丁은 앞좌석 또는 뒷좌석에 앉을 수 있다.
 ㄷ. C위원회 소속 甲(1급), 乙(2급), 丙(5급), 丁(6급) 중, K국의 의전 규칙에 따르면 5인승 자동차에서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와 일행 중 1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동일한 좌석에 앉는 사람이 있다.

※ 급수가 작을수록 높은 직급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8 -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B+C+D의 값은?

개구쟁이 甲, 乙, 丙, 丁, 戊가 함께 모일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날짜를 AB월 CD일의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만약 1월 23일이라면 AB는 01, CD는 23이 된다. A, B, C, D는 0부터 9까지의 정수 중 하나이다.

이 중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A, B, C, D에는 거짓말을 한 사람의 나이가 포함되어 있다.

○ 甲(5세): 우와, 모두 다른 숫자네!
 ○ 乙(7세): AB와 CD를 더하니까 26이 되었어.
 ○ 丙(9세): A, B, C, D를 모두 곱하니까 일의 자리 숫자가 0이었어.
 ○ 丁(6세): CD월 AB일도 마찬가지로 달력에 있는 날짜야.
 ○ 戊(8세): B와 D를 더하니까 9야.

- ① 10
- ② 13
- ③ 15
- ④ 18
- ⑤ 20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사무관은 A국 방문단의 본회의장 참관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 본회의장 참관은 다음 주 월·화·목·금요일 11:00~16:00, 매 정각부터 한 시간 단위로 진행될 수 있고, 점심시간(12:00~13:00)에는 참관이 진행되지 않는다.
 ○ 방문단의 본회의장 참관은 최소 5회 이상, 총 8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 한 번에 2시간 이상 진행되는 집중 참관이 최소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집중 참관은 진행 시간에 관계없이 1회의 참관으로 본다.
 ○ 본회의장 참관은 하루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참관 후 다음 참관 진행 시 최소 1시간의 간격이 필요하다.
 ○ 첫 참관은 월요일에 진행되어야 한다.
 ○ 월요일과 목요일 14:00~16:00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참관이 불가능하다.
 ○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14:00~15:00에는 방문단의 국회의장 접견이 예정되어 있어 참관이 불가능하다.

<보 기>

- ㄱ. 화요일 14:00~15:00에는 반드시 참관이 진행된다.
- 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 참관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다.
- ㄷ. 가능한 참관 일정의 총 가짓수는 20가지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마을 체육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회의에는 체육회에 등록된 각 종목의 대표가 참석하며, 종목 대표 중 1명이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이고, 종목 대표들의 이름은 김하늘, 이사랑, 박하나, 정희망, 최푸름이다. 이들의 좌석을 배치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좌석은 5개뿐이고 일렬로 나란히 배치하며, 체육회 회장은 3번 좌석에 앉는다.

- 김하늘은 축구 대표이다.
- 농구 대표는 배구 대표와 야구 대표 사이에 앉는다. 단, 이 3명의 대표는 이웃하여 앉는다.
- 최푸름과 이웃하여 앉은 사람은 1명뿐이다.
- 골프 대표는 4번 좌석에 앉는다.
- 이사랑은 배구 대표이다.
- 박하나는 야구 대표의 옆에 앉는다.

□□마을 체육회 회의 좌석

1번 좌석	2번 좌석	3번 좌석	4번 좌석	5번 좌석
-------	-------	-------	-------	-------

<보 기>

ㄱ. 최푸름은 1번 좌석에 앉는다.

ㄴ. 정희망은 골프 대표이다.

ㄷ. 체육회 회장은 야구 대표이다.

ㄹ. 이사랑은 3번 좌석에 앉는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람이 선택할 교통수단은?

甲시에 거주하는 가람은 乙시로 여행을 가고자 한다. 甲시에서 乙시로 가는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이 총 다섯 가지가 있다.

甲시에서 乙시로 가는 교통수단

교통수단 구분	비행기 A	비행기 B	버스 C	기차 D	여객선 E
甲시 출발시각	11:20	17:00	10:50	15:30	09:00
소요시간	1시간 40분	1시간 30분	5시간	3시간 20분	9시간
운임	23만원	15만원	4만원	12만원	10만원
편의성	3.0	3.5	2.0	4.5	2.5
접근성	2.5	2.0	4.5	4.0	3.5
낭만	2.5	3.0	0.5	4.5	5.0

가람은 아래와 같이 1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모두 더한 총점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을 선택하고자 한다. 단, 가람은 乙시의 일몰 예정시각보다 먼저 도착해야만 한다.

- 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교통수단부터 순서대로 5점부터 1점까지 부여한다.
- 운임이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부터 순서대로 5점부터 1점까지 부여한다. 단, 운임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로 1점을 부여한다.
- 편의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부터 순서대로 5점부터 1점까지 부여한다. 단, 편의성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1점을 부여한다.
-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부터 순서대로 5점부터 1점까지 부여한다. 단, 접근성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1점을 부여한다.
- 낭만은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점을 부여한다.
- 乙시의 일몰 예정시각은 18시 40분이다.

※ 도시 간 시차는 존재하지 않음.

- ① 비행기 A
- ② 비행기 B
- ③ 버스 C
- ④ 기차 D
- ⑤ 여객선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자동차를 장만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구매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등록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이는 소비자가 차량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 중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가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차량의 신차 출시가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경매 또는 공매취득 등 특례로 지정된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7%를, 화물자동차는 5%를 적용하되, 경형자동차는 종류에 관계없이 4%를 적용한다. 영업용 자동차는 일괄적으로 4%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Exemption Limit)’ 규정이 존재하나, 자동차 구매는 현실적으로 이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보기 어렵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취득세액의 85%를 추가로 공제한다. 반면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40만원까지만 면제 및 공제한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액의 50%를 경감하고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경감하며,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7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 75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 위 여러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19. 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②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양육하는 자가 11인승 승합차를 취득할 때 발생한 취득세액이 180만원이라면, 해당 양육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 ③ 경형자동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여 발생한 취득세액이 55만원인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없다.
- ④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 ⑤ 소비자가 신차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20. 위 글과 아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는?

<상 황>

- 甲은 7세, 15세, 18세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이다.
- 甲은 7인승 비영업용 전기 승용자동차를 중고로 매입하여 등록하고자 한다.
- 해당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2,5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신고가액 역시 2,500만원이다.
- 해당 차량에 대해 법인장부 등 특례 인정 증빙은 없다.
- 해당 차량의 신차 출시가는 6,000만원이었으며, 현재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잔가율은 0.6이다.

- ① 78,000원
- ② 350,000원
- ③ 875,000원
- ④ 1,120,000원
- ⑤ 1,260,000원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묘지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 묘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를 같은 분묘 안에 매장하는 묘지
2.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제00조(묘지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제00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에 매장된 자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① 개인묘지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를 동일한 분묘 안에 매장하면 이는 가족묘지로 분류된다.
- ② 부부를 같은 분묘에 합장한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기간은 부부 중 먼저 매장된 자의 매장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분묘의 최초 설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 ④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 제한은 비석의 높이 제한과 동일하다.
- ⑤ 가족묘지 안에 합장하고 분묘 1기와 상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구역의 면적은 12제곱미터가 될 수 있다.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민감지역”이라 한다)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제1항 각 호의 면적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호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면적기준의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은 제1항 각 호의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④ 둘 이상의 사업이 연접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의 시행 간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 기>

- ㄱ.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사업면적이 14만 제곱미터이고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 ㄴ. 습지보호지역으로부터 0.5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40만 제곱미터인 관광지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 ㄷ. 사업면적이 각각 10만 제곱미터이고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닌 두 개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연접하여 시행되고 시행 간격이 3년인 경우, 두 사업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 ㄹ. 민감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5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법원이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범위는?

제○○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누범 가중

2. 법률상 감경

제□□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제▽▽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조(누범 가중)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조(법률상 감경)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短期)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제☆☆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형이 징역보다 중하고, 징역이 금고보다 중한 형임.

<상 황>

甲은 2022년 1월 1일 절도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형의 집행을 종료되어 만기 출소한 甲은 이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2025년 1월 1일 시비 끝에 A를 살해하게 되었다.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甲은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법원은 甲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A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하여 살인죄의 법정형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여 양형을 하려고 한다.

- ① 2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 ② 2년 6개월 이상 30년 이하
- ③ 5년 이상 25년 이하
- ④ 5년 이상 30년 이하
- ⑤ 10년 이상 60년 이하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각각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보 기>

ㄱ. 근로자 甲이 자신의 할머니 乙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乙에게 甲 외에 다른 손자녀가 있다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ㄴ. 근로자 丙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ㄷ. 근로자 丁이 2026년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丁은 같은 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28일, 22일, 40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ㄹ. 근로자 戊가 2026년에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戊는 같은 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40일, 50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ㄱ, ㄹ
- ⑤ ㄴ, ㄷ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건설회사에 부과될 개발부담금의 금액은?

제○○조(개발이익의 환수) 시·도지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조(개발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대주택 건설
- 산업시설 건설

제△△조(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액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한다.

-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제◇◇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조(개발비용)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 개발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평가액

제▽▽조(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은 제△△조에 따른 부과기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100분의 25
-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100분의 20
- 그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100분의 15

<상 황>

○ 개발사업자인 甲건설회사는 부산광역시에 임대주택과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 甲건설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다.

○ 개시시점지가: 100억원, 종료시점지가: 180억원

○ 순공사비: 8억원, 조사비: 10억원, 설계비: 5억원, 일반관리비: 7억원

○ 정상지가상승률: 5%, 개발기간: 2년

○ 정상지가상승분 = 개시시점지가(원) × 정상지가상승률 × 개발기간(년)

○ 甲건설회사는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기부채납된 토지의 평가액은 9억원이다.

- ① 2억 5,000만원
- ② 3억 1,000만원
- ③ 6억 2,000만원
- ④ 31억원
- ⑤ 62억원

2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토지 보상금의 금액은?

<토지 보상금 산정 기준>

○ 토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 토지 보상금은 기본 보상금, 생활대책비, 이주정착금, 영업손실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본 보상금: m²당 공시지가 × 토지 면적(m²) × 1.3
- 생활대책비: 기본 보상금의 10%(해당 토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
- 이주정착금: 기본 보상금의 15%(해당 토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만 지급)
- 영업손실보상: 총 순이익의 2배(해당 토지에서 2년 이상 영업한 경우에만 지급)

○ 생활대책비와 이주정착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정착금만 지급한다.

<상 황>

토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甲은 m²당 공시지가가 50만원인 토지 1,000m²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에서 7년간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왔다. 또한 甲은 3년간 해당 토지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영업하였으며, 이를 통한 총 순이익은 2,000만원이다.

- ① 6억 5,000만원
- ② 7억 1,500만원
- ③ 7억 4,750만원
- ④ 7억 8,750만원
- ⑤ 8억 5,250만원

27. 다음 글과 <답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무관 A가 좌석을 양보할 승객은?

사무관 A는 의사당역에서 입법시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 승차하여 입법네거리역에서 하차하고자 한다. 입법시 도시철도 1호선은 다음 노선도와 같이 총 8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점인 의사당역에서 출발하여 종점인 입법중앙로역에 도착하는 노선이다. 노선도에서 ○은 일반역, ●은 환승역에 해당한다.

<입법시 도시철도 1호선 노선도>

A는 기점인 의사당역에서 승차하여 좌석에 앉았지만, 열차가 입법시청역에 도착하자 만석이 되었다. 이때 A는 빈 좌석이 없어 서서 가게 된 다섯 명의 승객 甲, 乙, 丙, 丁, 戊를 발견했고, 자신의 좌석을 이들 중 가장 나중에 하차할 한 명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A는 이들 다섯 명이 모두 입법시청역을 지나 각각 다른 역에서 하차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 추가로, 다섯 명의 승객에게 질문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 <답 변>
- 甲: 우리 다섯 명 중에서 A와 같은 역에서 하차하는 사람은 없어.
 - 乙: 나와 戊가 하차하는 역의 이름에는 ‘고시’가 포함돼.
 - 丙: 나와 甲이 하차하는 역의 이름에는 ‘입법’이 포함돼.
 - 丁: 나는 戊보다 먼저 하차해.
 - 戊: 나와 丙은 환승역에서 하차해.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6개의 안건을 순서대로 한 번씩 심사한다. 각 안건은 법률안(A) 또는 예산안(B) 중 하나이며, 법률안은 A1, A2, A3, A4, 예산안은 B1, B2가 있다. 안건의 심사 순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주어져 있다.

- 법률안 A3은 전반부(1~3번 순서)에 심사되었다.
- 법률안 A1 바로 다음에는 예산안 B1이 심사되었다.
- 법률안 A3 직전에는 법률안이 심사되었다.
- 예산안 B2는 3번 순서에 심사되지 않았다.
- 법률안 A1보다 법률안 A2가 먼저 심사되었다.
- 마지막 심사 안건은 예산안이 아니다.

<보 기>

- ㄱ. 법률안 A4는 6번 순서에 심사되었다.
- ㄴ. 법률안 A1은 예산안 B2보다 먼저 심사되었다.
- ㄷ. 법률안 A2는 2번 순서에 심사되었다.
- ㄹ. 예산안 B1이 4번 순서에 심사되었다면, 예산안 B2는 후반부(4~6번 순서)에 심사되었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에 들어갈 숫자를 알맞게 짝 지은 것은?

‘두 칸 조명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甲조명과 乙조명 2개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甲

乙

이 시스템은 발동된 즉시(0초) 甲조명과 乙조명 모두에 불이 켜지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후 아래와 같은 1~4단계를 반복하면서 운영된다. 단, 신호가 사라지거나 들어올 때 걸리는 시간과 불이 꺼지고 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한다.

1단계: 1초 후 甲조명에 A신호가 들어온다.
 2단계: 1초 후 甲조명의 A신호가 사라지고 乙조명에 A신호가 들어온다.
 3단계: 1초 후 甲조명에 B신호가 들어온다.
 4단계: 1초 후 甲조명의 B신호가 사라지고 乙조명에 B신호가 들어온다.

동일한 신호가 같은 조명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해당 신호는 서로 상쇄되어 즉시 사라진다. 예를 들어, 乙조명에 A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A신호가 乙조명으로 들어오는 즉시 기존의 A신호와 새로 들어온 A신호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조명에 신호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조명의 불이 꺼지고, 신호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조명에 불이 켜진다.

이 시스템은 조명 1개를 1초간 켜는 데 100원을 소비한다.

499초에서 500초 사이에 켜진 조명은

㉠

 개이고, 그때까지 소비된 금액은 총

㉡

 원이다.

- | | ㉠ | ㉡ |
|---|---|--------|
| ① | 0 | 37,500 |
| ② | 0 | 37,600 |
| ③ | 1 | 37,500 |
| ④ | 1 | 37,600 |
| ⑤ | 2 | 37,500 |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KOREA’ 각각의 글자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총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각 글자의 획수와 색칠 규칙은 다음과 같다.

글자	K	O	R	E	A
획수	3	1	2	3	3

○ 각각의 글자를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며,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색으로만 칠한다.

○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서로 같은 획수의 글자를 색칠하는 데 사용한다.

○ 노란색은 가장 적은 획수의 글자를 색칠하는 데 사용한다.

○ 글자를 모두 색칠한 결과 초록색과 파란색은 이웃한 글자에 색칠되지 않았다.

<보 기>

ㄱ. 노란색과 빨간색은 이웃한 글자에 색칠되지 않았다.

ㄴ. 주황색과 초록색은 이웃한 글자에 색칠되지 않았다.

ㄷ. K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면 A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

ㄹ. K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다면 E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회 □□위원회에는 甲, 乙, 丙 총 3명의 조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A법 개정안 2개, B법 개정안 3개, C법 개정안 4개, D법 개정안 6개, E법 개정안 1개, F법 개정안 10개가 회부되어 있다. 각 조사관은 1개 이상의 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하는 법에 대해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별로 1개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甲이 A법과 C법을 담당하고 있으면 총 6개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1개의 법을 2명 이상의 조사관이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는 없으며, A~F법에는 모두 담당 조사관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 丙이 작성해야 하는 검토보고서의 개수는 乙이 작성해야 하는 검토보고서 개수의 5배 이상이다. 甲이 작성해야 하는 검토보고서의 개수는 乙이 작성해야 하는 검토보고서 개수의 2배 이상 3배 이하이다. 담당하고 있는 법의 개수는 甲이 가장 많다.

<보 기>

ㄱ. 乙은 1개의 법을 담당하고 있다.

ㄴ. 丙이 작성해야 하는 검토보고서는 총 16개이다.

ㄷ. 현재 상태에서 甲이 담당하고 있는 법 중 어느 하나를 甲이 아닌 乙이 담당하도록 하면, 甲과 乙이 작성해야 하는 검토보고서의 개수가 같아질 수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행사장에 반드시 방문할 요일을 모두 고르면?

甲은 행사장 방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12월 둘째 주 일기예보를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았다.

<12월 둘째 주 일기예보>

날짜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씨	비	눈	흐림	맑음	비	흐림	맑음

○ 행사는 12월 8일에 시작하여 12월 14일에 종료되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행사장에 방문할 수 있다.

○ 행사 기간 동안 총 3일 행사장에 방문한다.

○ 눈이 오는 날은 행사장에 방문하지 않는다.

○ 같은 날씨에 두 번 이상 행사장에 방문하지 않는다.

○ 이틀 이상 연속으로는 행사장에 방문하지 않는다.

○ 일요일에 행사장에 방문한 경우 금요일에는 행사장에 방문하지 않는다.

- ① 일요일, 화요일

② 일요일, 목요일

③ 일요일, 토요일

④ 화요일, 목요일

⑤ 화요일, 토요일

33.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용사가 마왕성에 도달하기 위해 지나간 칸은?

용사는 마왕을 무찌르기 위하여 마왕성을 향해 여행을 떠났다. 안타깝게도 용사는 마왕성 앞에서 마법사의 계략에 빠져 잠에 들고 말았다. 용사가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는 아래와 같은 가로 7칸, 세로 5칸의 총 35칸으로 구성된 격자무늬의 가상공간이었고, 자신은 ♥가 그려진 칸에 위치하고 있었다. 단, 칸과 칸의 경계는 어느 칸에도 속하지 않는다.

북

서

4

동

남

				★ (마왕성)		
A	B	C	D	E		
	♥ (현위치)					

용사는 문득 자신의 손에 쪽지가 남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쪽지에는 이 상황이 마법사가 용사를 시험하기 위해 만든 시련이라는 설명과, 시련을 통과하기 위한 다섯 개의 <조건>이 적혀 있었다.

용사는 쪽지에 쓰여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마법사의 시련을 통과하여 자신의 지력을 입증하고 마왕성에 도달하였다.

<조 건>

- 조건 1: 현재 위치한 칸에서 총 여섯 번을 이동하여야 한다.
- 조건 2: 순서대로 동-서-남-북-동-서의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 조건 3: 한 번은 1칸, 한 번은 2칸, 한 번은 3칸, 한 번은 4칸, 한 번은 5칸, 한 번은 6칸만큼 이동하여야 한다.
- 조건 4: 격자무늬의 가상공간을 벗어나는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건 5: 여섯 번의 이동 결과, 최종적으로 ★이 그려진 칸에 도착하여야 한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D시에서 E시를 거쳐 B시로 가기 위해 터널을 통과하는 최소 횟수는?

甲국에는 A, B, C, D, E 총 5곳의 도시가 있다. 다음 조건에 따라 도시를 연결하는 터널이 있다.

○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의 터널은 2곳의 도시를 연결하며, 터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 A시에서 E시로 가려면 최소 3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 D시에서 E시로 가려면 1개의 터널만 통과하면 된다.

○ A시에서 다른 도시를 거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하여 갈 수 있는 도시는 2곳이다.

○ D시에서 다른 도시를 거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하여 갈 수 있는 도시는 3곳이다.

- ① 2회
- ② 3회
- ③ 4회
- ④ 5회
- ⑤ 6회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5년 8월 18일(월)에 ‘입법고시 제□□회 합격자 동기회’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 날부터 시행되는 동기회 규칙에 따라 동기회는 8월부터 아래와 같이 동기 모임을 진행했다.

- 매월 점심 동기 모임과 저녁 동기 모임을 각각 1회 진행한다.
- 점심 동기 모임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 동기 모임은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진행한다.
- 점심 동기 모임 날짜와 저녁 동기 모임 날짜가 공휴일인 경우 동기 모임을 진행하지 않는다.
- 2025년 하반기 공휴일은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추석 연휴(10월 5일~10월 7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뿐이다.
- 날짜의 일의 자리 숫자는 ○월 ○일에서 ‘○일’ 숫자의 마지막 한 자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5월 13일은 3, 6월 5일은 5이다.

<보 기>

- ㄱ. 2025년에 입법고시 제□□회 합격자 동기회가 진행한 점심 동기 모임 횟수와 저녁 동기 모임 횟수는 동일하다.
- ㄴ. 2025년에 입법고시 제□□회 합격자 동기회가 점심 동기 모임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이 아닌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진행했다라도 점심 동기 모임 횟수는 변하지 않는다.
- ㄷ. 2025년에 입법고시 제□□회 합격자 동기회가 진행한 저녁 동기 모임 날짜의 일의 자리 숫자는 모두 다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지역에 총 5개의 선거구를 확정하고자 한다. 각 선거구는 반드시 10개의 구역만을 포함해야 하며, 선거구 내의 모든 구역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각 선거구별로 지지 구역 수가 더 많은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서 승리하고, 정당별 지지 구역 수가 동일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없다. A지역의 구역별 정당 지지 분포와 선거구 확정안은 다음과 같다.

<A지역 구역별 정당 지지 분포와 선거구 확정안>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구역별 정당 지지 분포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가)안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나)안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다)안

- : 甲정당 지지 구역
- : 乙정당 지지 구역
- : 선거구

<보 기>

- ㄱ. A지역의 각 정당 지지 구역 비율과 각 정당이 승리한 선거구의 비율이 가장 근접한 선거구 확정안은 (다)안이다.
- 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 정당의 선거구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역의 수는 (나)안이 (다)안보다 많다.
- ㄷ. (가)~(다)안과 별개로, 甲정당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확정하여 A지역의 4개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7.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 ㉡, ㉢에 들어갈 수의 합은?

A국 국회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단독발의하거나 의원 2인이 법안을 공동발의할 수 있다. 의원별 법안 발의 건수를 산정할 때, 공동발의 법안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각각 1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甲의원과 乙의원이 1개의 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면, 甲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1건이고 乙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도 1건이다.

동일한 달에는 국회에서 총 2개의 법안까지만 발의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총 법안 개수를 산정할 때에는 공동발의 법안은 1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본다.

각 의원은 동일한 달에 2개 이상의 법안을 단독발의할 수 없고, 2개월 연속으로 법안을 단독발의할 수 없다.

<조 건>

- A국 국회에는 甲, 乙, 丙 총 3명의 의원이 있다.
- A국 국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1~6월)에 8개의 법안이, 하반기(7~12월)에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 乙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달에는 甲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 2025년 6월에는 甲의원과 丙의원이 각각 법안을 단독발의하였다.
- 甲의원은 2025년에 4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 甲의원은 2025년 9월에 丙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해당 법안 외에는 그 누구와도 공동발의한 법안이 없다.
- 乙의원은 2025년에 4개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중 단독발의한 법안은 3개이다.
- 乙의원은 2025년 하반기에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 丙의원은 2025년 하반기에 2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甲의원은 2025년 ㉠ 월, ㉡ 월, ㉢ 월에 법안을 단독발의하였다.

- ① 10
- ② 12
- ③ 14
- ④ 16
- ⑤ 18

3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국에서는 A~E 5개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사업유형에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면서 어떠한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구분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지정 요건	○ 총사업비가 900억원 이상 이면서 정부투자금이 600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700억원 이상 이면서 정부투자금이 400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7년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1,100억원 이상 이면서 정부투자금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800억원 이상 이면서 정부투자금이 300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
제외 사유	○ 경제성 분석 점수가 1.1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하 이면서 민간투자금이 정부 투자금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사업	○ 경제성 분석 점수가 1.3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1,200억원 이하 이면서 민간투자금이 정부 투자금보다 200억원 이상 많은 사업 ○ 조달금리가 4.9% 이하이면서 사업기간이 8년 미만인 사업

총사업비는 정부투자금과 민간투자금의 합이며, 경제성 분석 점수는 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사업	유형	총사업비 (억원)	정부 투자금 (억원)	사업기간 (년)	수익 (억원)	비용 (억원)	조달 금리 (%)
A	민간제안사업	1,260	520	7	5,926	5,518	5.1
B	정부고시사업	850	669	8	3,307	3,612	4.7
C	민간제안사업	1,040	370	7	6,805	5,740	5.0
D	정부고시사업	975	560	6	2,496	2,621	4.9
E	민간제안사업	1,552	760	9	7,014	5,993	4.8

- ① A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 ② B사업의 수익이 600억원 증가한다면 B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 ③ C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 ④ D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다면 D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 ⑤ E사업의 비용이 500억원 감소한다면 E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주택협회법(Housing Association Act)’의 적용을 받는 영국 주택협회는 사회주택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주택트러스트는 신탁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법률적 조직으로 19세기 말에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주택협회법에 따라 주택협회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협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세금감면, 공공기금 및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민간의 현금 및 주택신탁,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등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협회의 사회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체계도 갖추고 있다. 주택채권의 금리는 정부채권보다 높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는 낮다는 특징이 있다. 주택협회는 직접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택금융유한회사(THFC; The Housing Finance Corporation)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THFC는 개별 주택협회의 재무상태 및 성과 등을 통해 신용가치를 평가하고, 자산 및 수입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대출담보는 주택과 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장부가액이 대출액의 150%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THFC는 주택협회의 특정자산에 대해 고정담보를 설정하거나, 자산 전체에 대해 기업담보를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THFC가 주로 설정하는 고정담보는 가구가 거주할 때의 자산가치로 평가되며, 그 평가액은 주택의 실체가치의 50% 이상 70% 미만이다. 이 경우 담보대출액은 평가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영국의 주택·지역사회청(HCA; Homes & Communities Agency)은 등록 사회임대인의 저렴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HCA는 전국투자계획, 지역투자 요약서, 보조금할당 지침서 및 요약서 등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택협회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입찰하면, HCA에서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공공의 보조금 및 자금을 지원받는 등록 사회임대인은 사회주택의 임대료 및 운용·관리 등에서 HCA의 규제를 받는다. HCA의 규제내용은 주거기준, 성과모니터링, 소규모 공급자(단체)에 대한 규제, 재정규제 등이다. 등록 사회임대인은 재무현황, 지배구조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회주택의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대출금 상환총액에 유지관리비를 더하고 여기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이를 기초로 개별 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규모 및 쾌적성에 따라 차등화하되, 주변지역 민간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를 비교해서 임대료를 설정하고, 이것을 임차인에게 공람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임대료사정심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39. 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주택트러스트는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고 있으나 주택협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주택협회의 사회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주택채권의 금리는 정부채권 및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 ③ 주택금융유한회사는 주택협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 ④ 동일한 수준의 규모 및 쾌적성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입지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 ⑤ 주택협회는 등록 사회임대인의 임대료 및 운용·관리 현황 등을 규제한다.

40. 위 글과 아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X의 값은?

<상 황>

실체가치가 (X)만파운드인 A주택에 THFC가 고정담보를 설정했다. 이때 가구가 거주할 때의 A주택 자산가치 평가액은 주택 실체가치의 50%로 하였다. A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액은 210만파운드이다.

- ① 280
- ② 360
- ③ 450
- ④ 540
- ⑤ 630